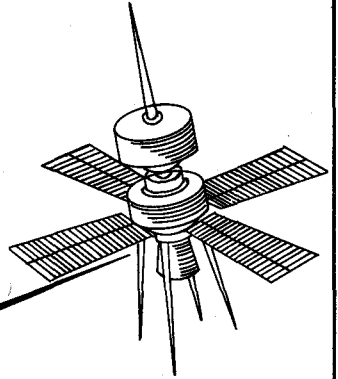


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편집부차장)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는 양축농민들로 부터 매우 환영받는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본회 및 각 축산관련단체는 약 10여년에 걸쳐 이를 해결코자 농림수산부 및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양성화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때마다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건설부, 환경처의 입장이 서로 달라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만을 전달받아 왔으나, 다행히 이번에 관련6개부처 및 국무총리실, 감사원, 청와대까지 적극 협력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8개 법률에서 축사건축에 제약이 되는 사항들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마련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축산정책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계농가는 표본조사 결과 약 90% 이상이 무허가 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단속이 있을 때마다 원상회복, 철거명령, 고발, 구속, 벌과금부과 등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은게 사실이다.

60평 미만의 축사는 신고로 조치되며 본인이 농촌지도사와 협의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를 설계하여 첨부하면 쉽게 처리가 되며, 60평 이상의 축사는 건축사가 설계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소정의 설계도서를 첨부하되 설계비용은 61~150평은 평당 3,900원, 151평 이상은 4,200원으로 현행 설계비의 30% 수준으로 감액 적용토록 조치하였다.

이제 많은 양축농민이 원하던 사안 하나

가 해결된 셈인데 문제는 이제부터 이다. 이같은 조치를 빌미로 축사를 투기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나, 사법처리 후 부과되는 벌과금이 있어 양성화조치를 회피한다면 언제 불이익을 입을런지 모른다. 과거에야 눈감고 아용하는 식으로 잘모르고 그랬으니 봐달라고 떼라도 썼지만, 민주화가 정착될 수록 법의 집행은 공정성을 고집하게 마련이다.

조치 후 사후관리가 너무 길다는 생각은 곧 축산업을 평생업으로 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자기 땅에 농업을 하기 위해 계사를 지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법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의 조치가 불안의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일단 양계업발전을 위해서 해당 농가는 모두가 모처럼 만들어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경영진단사업

어떤 사업이건 경영을 진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양계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된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자기 농장 경영에 대한 진단조차 해본적이 있는가 하고 반문한다면 몇몇을 빼고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농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양계인들이 과학적인 경영을 통하

여 소득을 높이려 했다기 보다는 계속 증가해가는 축산물 소비에 힘입어 금고나 통장에 돈이 남으면 흑자였고, 부채가 발생하면 적자 경영을 했다는 판단을 대부분 해왔다고 보여진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 큰 사업을 하면서도 경영분석은 커녕 사양관리일지도 남기지 않는 농장들이 대부분이어서 생산성을 분석해내는데 기준이 없었다. 얼마안되는 월급으로 살림을 하는 주부가 가게부를 작성하는 것을 볼때 양계농장의 경영은 너무나도 과학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동떨어졌던게 아니었나 한다.

본회는 금년 7월1일부터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축산경영진단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대상농가는 육계 15농가, 채란계 15농가를 선정, 총 30개 농가에 대해 '93년6월까지 1년간에 걸쳐 경영일지를 작성하여 정확한 경영분석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의 지표를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설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경영분석이 토대가 되어야 생산지표가 서게되고 지표가 서야 이에 필요한 목표를 향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으므로 본회가 시범적으로 선정한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기 사업을 위해 경영분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 양계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생산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즉 어디가 문제인가를 알아야 쉽게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많지만 우선 순위

를 몰라서 생산성 향상을 입으로만 해왔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된다. 양계산업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영진단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길만이 과학양계로 진입해 갈 수 있는 첩경임을 강조한다.

육계값 폭락사태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 및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계열화사업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육계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86년 이래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9월 중순에 중부권에서는 육계 하이가 400원대 이하에서 거래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에 편승하여 병아리 가격도 생산비선 이하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어, 이에 상당량이 유정란화해 식란으로까지 처분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서고 있다. 사실상 금년초부터 육계업계에는 불황 다음에 호황이 온다는 경기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하여 연속 불황이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분석해 보면 생산은 전년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비부진이 육계불황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직 닭고기가 체화되어 폐기했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생산되면 소비는 다 되는데 소비부진으로 가격형성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황 후의 호황 기대심리나, 병아리가격의 하락



으로 위험부담이 적어 막연하나마 입추는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이 사료생산량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산지출하격이 아무리 하락하여도 소비자 가격은 별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통의 병목현상이 아직도 계열화사업이 이를 흡수치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계속 적자 경영을 해온 육계인들은 일말의 호재가 보이면 입추에는 주저하지 않는 편이다. 이 같은 적자 경영이 금년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육계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다시한번 막연한 기대심리로 육계업을 경영하겠다는 과거의 인식을 버리고 소비를 유도해 가면서 변화된 구조의 테두리 속에서 실속있는 육계경영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